



# 대학원중심대학의 문제점과 대책



장 민 수  
부산대 교무처장

## I. 대학원중심대학

### 1. 필요성

21세기를 맞이하여 지식 경쟁을 선도하는 선진국의 대열에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학사 구조와 좋은 연구 결과 창출을 위한 연구 조직 모델을 단기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현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국내 대다수의 대학원 과정은 학사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의 부수 과정으로 운영됨으로써 국가 발전에 필요한 고급 두뇌와 전문인력을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 대학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석·박사 과정 이수를 위해 우수한 두뇌가 해외 유학의 길을 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외형 위주의 저기술 노동집약적 경제성장을 추구해 온 우리나라 산업사회의 특수성과 대학사회의 폐쇄성에 기인한다. 산업사회의 인력 수요 경향은 지식의 생산과 축적보다는 단기적, 단편적 지식 수입과 활용에 치중하여 대학 졸업생에 대한 수요가 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사이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고 우리 스스로 고급 지식 생산과 축적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연구에 의한 교육과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대학원중심대학을 구현하고 이를 국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하고 지원할 때라고 판단된다.

### 2. 대학원중심대학의 유형

첫째, '하버드 대학형' (대학원 학생 수가 학부 학생 수 보다 많으며 전체 학생 수가 15,000명 정도로 특성화 분야의 첨단화, 일류화를 지향하며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대학 모형)의 대학원중심대학과 둘째, 'UCLA형' (대학원 학생 수/학부 학생 수=1/2의 비율로 균형적 분포를 가지면서 전체 학생 수

는 약 30,000명 규모의 종합대학이다. 기능상 특성화 분야와 기초학문분야 및 소외학문분야가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서 급변하는 사회의 필요인력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모형)의 대학원중심대학이 있다. BK21사업은 1999년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 특화분야, 핵심분야, 지역대학 육성분야로 구분하여 대학원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가 처음에 요구한 대학원중심대학의 유형은 서울대학교에 적용할 당시에는 '하버드 대학형' 대학원중심대학을 구상하는 것 같았으나, 그 개념이 모호해지고 현재는 'UCLA형'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 상기 두 유형을 인정한다고 하면, 일부 대학(서울대학, 포항공대 등)은 하버드형을 지향하겠지만 일부 대학은 UCLA형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3. BK21 사업 파행적 운영과 모순

지식사회의 시대적인 요청에 의하여 모처럼 정부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대학원중심대학의 모델이 시행 과정에서 일부 사립대학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왜곡 변형된 결과로 파행 운영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교육철학의 부재, 원래 지향하던 목표의 상실 등으로 사업 후에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다. 본래 구상된 이상적 모델은 서울대학은 완전 대학원 중심의 대학(하버드형)으로 구축하고, 지방 국립대학은 학부 교육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지방 국립대학을 모두 서울대학교로 보는 개념과 같다. 이것은 지방의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한 개념이기 때문에 국토의 균형발전에 완전히 역행하는 시책이다. 게다가 그런 모델마저 수도권 사립대의 반발로 사업비의 나눠 먹기 식 분배로 말미암아 본래 계획

하고 구상한 뜻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에 재정 지원을 더해 준 결과만 초래하여 지방과 수도권 대학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 결과만 얻게 되었다. 지방 거점대학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고 있는 현 BK사업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 4. 대책

대책으로는 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이미 교육 투자가 넘쳐 나는 서울대학 등 일부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보다 국가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교육 투자의 결과에 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방 거점대학에 균형적인 투자를 해야 하며 차분히 하나씩 100년 대계의 교육의 열매를 거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간평가에서 강제적으로 10~20% 사업단을 탈락시켜 후발주자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경쟁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기왕에 투자된 재원의 실효(實效)를 거두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교육정책 시행 과정에서 보여줘야 한다. BK21사업과 선정에서 처음 탈락된 팀들은 8년 동안 대학원과 연구실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저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 실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II. BK21 사업과 대학원 교육

대학원 교육과정에 있어서 석사과정 2년과 박사과정 3년은 연구자의 길로 들어선 인생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학위를 받기까지 5~7년이라는 긴 시간은 그들의 인생 중 황금기에 속하며 한 인간에게 있어서 대단한 투자이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된 연구자들이 모두 귀하게 쓰이는 것은

“

정부는 국가의 장기 발전 계획을 논하면서도 교육보다 연구를 더욱 강조하는 단기적인 전략·정책을 구사하는 것 같다. 대학원 교육의 이념, 방법, 평가 등의 중요성이나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한결 낮아지고 있다. 기초과학의 연구나 국가경쟁력 강화는 영원한 국가 과제인데 대학원 교육이 등한시되고 교육 여건이 악화된다면 다음 연구 세대를 이을 '사람의 힘(人力)'은 배양되기 어려울 것이다.

”

아니다. 더구나 각 대학의 입장에서는 양이 질을 낳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자의 저변 확대를 강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군사문화적 자본주의 하에서와 같은 기업 육성이나, 오직 메달 획득만을 목표로 올림픽 선수들을 훈련시켜 온 것처럼 단기적으로 성급하게 목적 달성을 할 생각을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누군가가 능력이 있어서 국가의 산업 또는 기업의 동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대학원생의 수를 통제하면서 양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석사 이상의 연구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절대량이 적기 때문에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분야에 따라서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동일 전공분야에서 계속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몇 년 전 생물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연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법시험에 제도전하여 성공한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대학원 교육의 시작부터 대학원 교육을 마친 뒤 평생직장인 연구 생활까지 연구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과정(Normal Process)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가 그 기반을 준비해 주어야 하며 이것이 BK21 사업의 핵심 마인드이어야 한다.

일본의 대학에서도 대학원 교육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 물리학회는 1992년부터 '지금, 대학원이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주제의 글을

일본 물리학회지에 연재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지난 10여 년 간에 걸친 일본 물리학과 한국 물리학의 흐름을 비교해 보면 대학원 교육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후반에 취업을 하지 못한 물리학 over doctor가 100여 명이 넘었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위 취득 후 1년간 정부(과진(科振) : 우리나라 과학재단 성격을 가짐)가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 무렵 일본인이 미국 IBM의 software를 불법 유출시킨 사건(산업 스파이 사건)으로 일본의 대기업이 벌금형을 받고 각성하면서 기초 학문을 전공한 over doctor를 채용했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의 대학교수가 대학원 교육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점은 기업체는 고급인력 양성과 공급을 요망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학원 지원자가 수가 격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원 지원자 감소 현상은 그러한 현상이 훨씬 빨리 찾아온 소규모 대학이나 지방대학과 R&D를 생명처럼 여기는 일본 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립대학이나 지방대학은 동경대학과 같은 백화점 식의 교육을 지양하고 커피 전문점처럼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전문화하는 교육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원 제도도 재정리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고급 연구인력 공

〈표 1〉BK21 사업 현황

사업 분야	서울 지역	과기원·광주과기원· 포항공대	기타 지역	비고(계)
과학기술분야	29(60.4%)	15(31.3%)	4( 8.3%)	48
인문사회분야	18(90.0%)	-	2(10.0%)	20
특화분야	7(58.3%)	-	5(41.7%)	12
핵심분야	200(63.1%)	18( 5.7%)	99(31.2%)	317
지역대학육성분야	-	-	42(100%)	42
계	254	33	152	439

〈표 2〉주요 대학별 대학원생 변동 추이

대 학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서울대학교	5,788	2,495	5,947	2,494	6,184	2,605	5,894	2,641
연세대학교	2,593	1,070	2,730	1,083	3,085	1,228	3,233	1,215
고려대학교	2,831	1,169	3,092	1,454	3,232	1,505	3,273	1,542
경북대학교	2,230	853	2,267	894	2,114	904	2,165	940
전남대학교	1,442	639	1,676	686	1,857	793	1,972	813
전북대학교	378	135	471	148	491	169	521	180
부산대학교	2,447	888	2,542	955	2,634	980	2,711	1,022

급의 절대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기업이 한 전문분야에서 최대로 신장할 수 있는 극대 변곡점에 도달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전에 각 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기업 변신을 하고자 더욱 고급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BK21 사업을 보면 국책대학원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이 계열별 또는 학부별 교육을 한다는 명분 하에 각 학과를 정리 정돈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명분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에게도 닥쳐올 지도 모르는 일본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지나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서서 것은 단지 기우일 뿐인가? 적어도 정부가 1세기를 앞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거두고자 하는 빛나는 결실만 볼 것이 아니라 빛나는 결실을 위해 허물어져 가는 기반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BK21 사업은 〈표 1〉과 같이 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 특화분야, 핵심분야, 지역대학 육성분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분야에서 대부분의 연구팀이 서울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연구비의 분포도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서울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서울 선호도가 높은 것이 국민들의 강한

성향인데다 정부의 집중 지원까지 이루어진다면, 안 그래도 대학원 석·박사 지원자가 정원을 넘기 힘든 지방대학의 대학원은 연구원 충당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대학의 연구인력 저변 확대를 위한 대학원 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표 2>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의 대학원생 변동 추이는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약간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서울 집중적 BK21 사업비의 투자에 비하여 학생 증가율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교육도 일본과 같이 대학원 지원자가 줄어들게 될 때, 또 서울 지역에서만 대학원 교육을 전담하게 될 때, 기업체의 고급 연구인력 수급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균형적 발전이라는 원래의 정부 정책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정부는 국가의 장기 발전 계획을 논하면서도 교육보다 연구를 더욱 강조하는 단기적인 전략·정책을 구사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국가 시책에 조금 더 접근하여 생각해 보면 대학원 교육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대학원 교육의 이념, 방법, 평가 등의 중요성이나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한결 낮아지고 있다.

기초과학의 연구나 국가경쟁력 강화는 영원한 국가 과제인데 대학원 교육이 등한시되고 교육 여건이 악화된다면 다음 연구 세대를 이을 '사람의 힘(人力)'은 배양되기 어려울 것이다. 모처럼 국가가 대학원 교육을 위하여 구상하고 실행하고 있는 BK21 사업이 조화롭지 못한 연구비 구성 등 빈익빈 부익부를 낳게 한 현실은 교육을 위한 또는 연구

를 위한 정책의 결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별로 대표성 있는 대학교에 지역의 중심이 되는 종합대학원(가칭)을 설치하여 그 지역의 대학원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합대학원이란 해당 지역사회 내의 학문 분야별 연구인력(교수, 연구원)을 결집하고 연구에 참여시켜 일정 규모와 연구 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연구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대학원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큰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원생은 장래 고급 연구인력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므로 산업사관학교 운영과 같은 적극적 개념을 가지고 보다 조직적인 양성을 하고 충분한 대우를 하되 철저한 직업 의식, 역할 의식, 사회 의식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3세대 교수들이 탄생할 때가 되었다. 역시 학문은 3세대부터 시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1세대가 방황의 세대라면 2세대는 갈피를 잡는 세대이고 3세대는 매진의 세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초학문 연구는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다. 3세대 교수들이여, 기초학문 연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자! **장민수**

#### 장민수

경북대 사범대학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 물리학 과에서 이학석사, 도쿄대 대학원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하였다. 부산대 유전체물성연구소(SRC) 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물리학회 부회장, 부산대 교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강 유전체 입문」, 「유전체, 광학결정」(역) 등과 강유전체물성에 관한 다양한 논문이 있다.